



주간통일정세 2014-29(2014.07.21~07.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2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7/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7.20), 韓美 등의 北 미사일발사포사격에 대한 '도발위협' 지적에 "정정당당한 군사행동,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라고 강변 및 "우리 식의 보복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한미훈련 중단 거듭 요구..."보복' 빈말 아니다"(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시비질은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미국과 남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보복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외세와의 북침합동 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다음달 예정대로 실시되면 "가뜩이나 참여한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며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7/2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7.23),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응원단 참가는 "북남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는 선수단응원단 파견 문제를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고 피력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9호(7.24), 청주지법에서 수차례 '北 만세'를 외친 공안사범에 대한 형량 연장 관련 '의사표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파쇼의 암흑시대, 인권폐허시대'라고 비난하며 '탄압책동 중단' 촉구(7.24,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한민구 국방 비난…"죽지 못해 안달"(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친개의 분별없는 전쟁 광기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가소롭기 그지없는 폭언", "객기", "넋두리" 등으로 폄하하며 "답도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린다"고 비판함.
- **北 체육인, 인천 AG 참가 의지 잇따라 피력(7/23, 우리민족끼리)**
 - 북한 체육성과 올림픽위원회의 체육인들이 '우리민족끼리' 기고를 통해 23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지를 밝힘.
 - 체육성 소속이라고 밝힌 강일만은 기고문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일념 밑에 훈련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한민구 국방 연일 비난(7/24, 조선중앙통신)**
 -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對北발언(北 도발시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할 정도의 단호한 응징) 관련 '현 정권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통치로 정국이 막다른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풍을 타고 부푸는 것이 군부패당의 응징허세'라고 비난하며 '예측할 수 없는 타격력을 안다면 가만있는 편이 좋다'고 주장함.
- **北 정전협정 61주년 분위기 고조…"韓美는 패배자"(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참패의 수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한을 "이 세상에 패한 전쟁까지 '이긴 전쟁'으로 둔갑시키는 낯두꺼운 자들"이라며 '패배자'로 규정함.
 - 이어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나서 패자의 수치심으로 눈물을 흘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승전일' 지정 높음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통일준비위는 체제통일 시도" 비난(7/25,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25일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불순한 모략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통일준비위원회 조작 높음은 민족을 전쟁의 재난 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우롱모독하는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민주조선은 박근혜 정부가 "북남 공동선언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변형시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것을 내돌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위 발족도 "여론을 오도해 저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체제통일 준비를 다그치자는 것"이라고 비난함.

다. 군사 관계

- **北, UFG겨냥 서해 남포서 국가급 상륙훈련 준비(7/21,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다음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국가급 종합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21일 "북한이 2~3주 전부터 서해 남포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상·공중·해상 병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종합훈련 규모로 판단된다"고 전함.

- **고의적인 생트집, 계획적인 도발(7/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北 전술로켓발사와 포사격훈련에 대한 우리 대통령 발언(도발할 경우 초전에 강력한 대응으로 응징 등) 등 관련 '고의적인 생트집으로서 남북관계와 조선반도의 침예한 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 압살흥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왜곡 비난함.

- **北, 황해도 장산곶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7/26, 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저녁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북한은 오늘 오후 9시40분에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500km 안팎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개성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13일 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라. 경제 관계

- **개성공단 기반시설 국제표준인증 추진(7/22,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공단 내 버스사업소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과 정배수장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각각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北, 대북지원 활동 '드레스덴 무관 확인' 요구(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16년 안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최근 민간단체들이 방북해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보도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 사업이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확실히 얘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함.
- **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 촉구(7/25, 연합뉴스)**
 -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 측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3통 분과위 회의 개최를 촉구"함.
 - 우리 측은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을 통한 일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공급 시기 확정 등 시급한 3통(통행통신통관) 현안을 논의하지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그동안 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마. 사회 관계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오늘부터 재개(7/22, 연합뉴스)**
 -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22일 재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등에 따르면 22일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등 13명이 개성시내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부산매직페스티벌에 北 미술자료도 전시(7/24, 조선신보)**
 - 8월 초 열리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BIMF)에 북한 미술 자료도 전시된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번 행사에서 '평양요술단'의 특별전도 열린다며 "특별전에는 조선(북한) 요술사들의 사진과 동영상, 조선에서 제작된 요술 도구, 의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함.

2. 핵문제 및 외교

가. 주요 매체 논평

- **北, 안보리 '미사일 규탄' 연일 비난... "군사력 계속 강화"(7/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안보리가 지난 1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신아인 전술로켓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누가 뭐라고 하든,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 전술로켓 발사와 핵무력 건설, 군사훈련을 비롯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인 군사력 강화 조치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도 22일 '강위력한 군사적 억제력은 평화의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의 핵전쟁 도발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이 치솟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무진막강한 자위적 핵억제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도발자들을 제압하는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전쟁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되게 된다"고 역설함.

● 공화국의 전략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 될 것이다(7/2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韓美 해상합동훈련 관련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진짜 도발자, 평화파 괴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며 '진실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옳을 것'이라고 주장함.

●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7/20, 조선중앙방송)

- 美 '조지 워싱턴'호 등 참가 韓美 해상합동훈련 등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함.

● 미국은 포함외교로 우리를 놀래울 수 없다(7/22,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美 '조지 워싱턴'호 참가 韓美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北)의 자위적 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예화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또한 美 '조지 워싱턴'호 부산 입항을 '포함외교(砲艦外交)'에 비유하며 "미국이 부질없는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세계최대 대량살육 무기전파국의 횡당무제한 망발(7/22, 조선중앙통신)

-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토머스 쾀트리맨)의 발언(北 대량살상 무기 전파 가능성에 우려)에 대해 "횡당무제한 망발"이라며 '무기수출 책동으로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전파설을 내돌리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함.

● 시비질은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7/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우리 정부의 '北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난(도발



위협, 결의위반)에 대해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동족대결정책과 외세와의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정전협정 기념일 앞두고 "美, 도발하면 징벌"(7/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불을 지른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1년이 됐지만,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첨단군사장비 증강과 군사적 도발, 대규모 전쟁연습 등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제의 항복서는 우리의 발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응징'을 다짐함.
 - 또한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설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감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침략군이 발붙이는 모든 곳을 타격할 것이며 침략의 아성을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이라고 위협함.
- **「전승절」 관련, 미국 승전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 연출 왜곡 주장(7/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전승절」과 관련해 '미국이 해괴하게도 저들의 승전일로 둔갑시키는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수치스럽다면 둔갑술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만있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함.

나. 대미

- **재미 한인 이산가족 방북... "누나 유골이라도"(7/23,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방씨 등 재미 한인 2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오는 10월 1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함.
 - 북측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신청자로부터 비료·옥수수값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을 '적정한 선'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VOA가 전함.
- **北 "美 '전략적 인내' 실패"...대북정책 전환 요구(7/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 전직 관료들이 최근 잇달아 전략적 인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한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주도했던 고위인물들이 정책 변화를 들고 나오는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 신문은 "구태여 오바마 자신이 고안해내고 애써 실현하려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면 정상적인 현실적 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뱃심"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억제력인 우리의 핵 타격 수단들은 다종화되고 보다 위력해질 것"이라고 보고 "제2조선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 본토가 무사하리라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천진난만한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케네스 배 영사 면담 요청에 녀 달째 무반응(7/24,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 씨의 영사 면담이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녀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다. 대중

- **北, '북핵불용' 중국에 "좃대없다" 노골적 반감(7/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며 남한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밝힘.
 - 중앙TV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일부 좃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해 미국의 구린내 나는 썩무니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비판함.
- **北 노동신문, 또 중국 비난..."미국 횡포 목인"(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누구도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단거리미사일 규탄 언론 성명을 거론하며 "비극은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며 목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北, 무역상들에 한중관계 정보수집 명령"(7/26, 아사히신문)**
 - 중국 동북지방인 랴오닝(遼寧)성에 사는 북한 무역상이 이달 중순 평양에서 정권 간부로부터 한중 접근의 이유와 경제협력 현황, 북중무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거래 상대인 중국 기업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함.



라. 대일

● 北, 자진입북 일본인 대상 송환자 선별착수(7/23,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은 23일 북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난 4일 공식 설치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입북한 일본인을 칭하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확인 및 청취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본으로 송환할 대상자 선별도 시작했다고 보도함.

-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단장 :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 상임위 부장), 7월 22일 평양 출발(7.22, 중앙통신·중앙방송)

마. 국제기구

● 박봉주(내각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입장 표명(7/26, 조선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는 7월 24일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장-클로드 융커(*전 룩셈부르크 총리)'에게 축전 및 '北-EU 친선협조관계 발전 확신'을 표명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바. 기타

● 北 평성시, 네팔 박타푸르시와 '친선도시' 결연(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네팔에서 이루어진 북한 평안남도의 평성시와 네팔 박타푸르시의 '친선도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에 북한 측에서 안명옥 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성시 친선대표단과 네팔 주재 북한대사가, 네팔 측에서 노동자농민당 지도부와 박타푸르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밝힘.

- 北 친선문화대표단(단장: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7월 21일 영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환(7.21, 중앙통신·평양방송)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대표단(단장 : 미하일 판첸코 총서기), 7월 22일 평양 도착(7.22, 중앙통신·중앙방송)
- 감비아 대통령, 7월 19일 自國 주재 北 대사 '홍선표' 접견(7.25, 중앙방송)
- 브라질공산당 대표단, 7월 26일 귀국(7.26,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강원도 과일농장 현지지도…생산 독려(7/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24일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동행함.
 - 김 제1위원장은 새로 건설한 전망대에 올라 과일을 생산하는 농장 전경을 바라보며 "인민의 이상향이 활짝 꽃피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며, 사과나무의 생육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도 약속함.
-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시찰…"대외시장서 손색없어야"(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원산구두공장의 연혁소개실,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 시설을 찾아 생산 현황과 제품의 질을 파악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품의 경량화 등을 강조함.
 - 원산구두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사칭호 명령 하달(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7월 1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 오금철(항공군 대장), 최귀현(육군 상장), 장철국연성국김태철박광반한광호(해군 소장)에게 군사칭호를 수여함.
-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영남, 박봉주, 현영철(보고),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최부일,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로두철, 조연준, 김영대이 주석단으로 참가함.
 - 통신은 현영철이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혁명무력의 무장장비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함.
 - 통신에 의하면 '김일성의 戰勝 업적과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김정은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주한미군 타격 임무 부대 로켓훈련 지도"(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



두고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발사 훈련에는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26일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세운 발사 계획을 점검했으며 훈련을 마친 뒤 전술 로켓 성능을 "완벽한 것"로 평가했으며, "최근 주체적인 로켓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됐다"며 "이번 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이라고 말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조선중앙통신)

-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황병서, 리영길, 현영철, 변인선, 서홍찬, 박영식, 럽철성, 조경철 등 동행했다고 밝힘.

■ 김정은 동향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살 장수자 김관청(평북 박천군 송석리, 女)에게 생일상 전달(7.21,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사업을 지원한 근로자들에 감사전달(7.25, 중앙방송)

나. 간부 동향

● 北외무상, ARF 전후 아세안 공들이기...정부, 주시(7/22,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는 8월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얀마 외에 라오스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순방할 것으로 전함.

● 박봉주(내각 총리), 함흥시 內 소공장 현지요해(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남도 함흥시 內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현지요해했다고 전함.

● 北, 인도 주재 대사에 계춘영 임명(7/2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인도 주재 대사에 계춘영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계춘영 신임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사무국 북한대표부에서 부대



표로 활동해온 외교관으로, 2009년 8월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北 공군 담당 부총참모장 오금철, 19년 만에 대장 진급(7/2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7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장성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오금철에게 항공군 대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고 전함.
- 공군 비행사 출신의 오금철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한 항일빨치산 1세대인 오백룡의 아들로 1995년 상장에 오른 지 무려 19년 만에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 통신은 또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최귀현이 육군 상장으로 진급하고 장철국, 연성국, 김태철, 박광빈, 한광호 등 5명이 해군 소장에 올랐다고 밝힘.

-駐감비아 北 대사 '홍선표', 7월 15일 同國 부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7.24, 중앙방송)

다. 공식 행사

● **김일성父子 동상 제막식, 평북 신의주에서 진행(7/24,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제막사), 박봉주, 현영철,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양형섭, 김평해, 로두철, 김용진(내각 부총리), 리만건(평안북도당 인민위 책임비서), 최종건(평안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北, 정전협정 6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7/26,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전승절) 6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녹화방송으로 내보냄.
-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강석주·김평해·오수용·곽범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자리함.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군인들, 7월 21일 정전협정 체결일(전승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27) 즈음 '군자혁명사적지(평남 성천군)' 참관 및 백두산 위인들의 위대성 해설과 웅변모임 진행(7.21,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기념보고회, 7월 22일 최태복(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보고), 김용진(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26, 중앙통신 중앙방송)

라. 주요 논조

-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장마피해 대책 논의(7/13; 7/22, 민주조선; 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지난 7월 13일에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하며 내각 직속 기관 간부들과 도·사·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이 참석했으며 임철웅 부총리가 보고를 맡았다고 밝힘.
 - 민주조선은 전원회의에서 3분기 내각의 '중심 과업'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전력생산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치켜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농업 부문에 계속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내각에 집중시켜 풀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7/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이 22일 밝힘.
- "北 '전승절' 앞두고 상이군인 지원 독려"(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을 앞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상이군인 노인을 몇 년째 지원해온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인민보안원(우리의 경찰)을 소개하며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했다"고 치켜세움.



● 北 정전협정일 자축... "승리의 역사 계승하자"(7/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전승 업적을 후손 만대에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6·25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선군 사상과 자위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6면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6·25 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들을 묘사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60년 전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8면 '영웅 조선의 승리는 포화속에서 이미 마련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국립교예단 창립 등 6·25 전쟁 기간 전선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은 노력이 훗날 발전의 초석을 이뤘다고 주장함.

-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일, 7.27)' 61주년 즈음 김일성의 '戰勝 영도 업적' 찬양 및 '김정은이 반제반미 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7.23, 중앙통신)
-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에 즈음하여 '韓美의 공화국 압살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다'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강조 및 '계급교양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업'이라며 '반미교양사업' 강화 주장(7.21, 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김일성의 사상과 신념, 전략적 전술과 영군술의 빛나는 승리'라고 칭송하며 '김정은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 나가자'고 호소(7.27, 중앙통신·노동신문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평양 과학단지 등 6곳에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7/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밝힘.
- 통신은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동, 과학1동, 과학2동, 배산동, 을밀동의 일부 지역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추진하고 황해남도 강령군 강령읍에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를 세운다고 설명함.
- 평안남도 청남구 룡북리에 청남공업개발구가, 숙천군 운정리에 숙천농업개발구가 각각 들어서고 평안북도 삭주군 청성노동자구와 방산리에는 청수관광개발구가 조성될 예정임.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국제여행사를 비롯한 여러 여행사들, 국제관광시장 호평을 선전(7/21, 조선중앙통신)

- 北 국제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사들이 다양한 주제의 관광일정들을 국제관광시장에 내놓아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선전함.
- 통신은 등산관광(현지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며 등산), 비행기애호가관광(다양한 기종 참관촬영, 탑승 등), 열차관광(기차로 여러 도시들, 명승지들 유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 유람), 건축애호가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 체험관광(협동전야와 과수원에서 모내기나 과일 따기 등), 실업관광(투자와 합영 합작 등 조직), 낚시관광, 회의관광 등은 여러 형태의 관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전함.

● 北 원산 갈마반도 개발 주목... "숙박시설 10배 ↑"(7/23, 연합뉴스; 평양타임스)

-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23일 주간 영자신문 평양타임스를 인용해 작년 11월 발표된 원산지구 개발 계획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천400여ha 부지의 갈마반도 지구는 크게 숙박구, 회의전시 박람회, 체육경기구, 경제개발구, 상업편의봉사구로 나누어 개발되며, 북한은 원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현재 1천30여명 수준의 호텔숙박 능력을 1만 1천여명으로 10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평양서 유기농 국제회의 개최(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과 공동주최로 지난 21~23일 평양에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5월1일경기장(능라도) 개건 보수공사 총 공사량의 75% 진척 선전(7.21, 중앙통신)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장마철 석탄 생산성과(매일 계획 초과 수행) 선전(7.22, 중앙통신)
-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 7월 23일 평양에서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한 가운데 개막(7.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쌍용광산, 7월 '린정광'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7.24, 중앙방송)



- 北 기상수문국, 태풍10호의 영향으로 폭우와 많은 비를 예견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을 통보(7.24, 중앙통신)
- 평양시 도로관리원들의 회의, 7월 25일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7.25, 중앙통신)
- '각지 요양소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각종 의료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요양의료 봉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라고 선전(7.25, 중앙통신)

다. 경제 상황

- 北, 중국산 공기정화설비 대량 수입 '눈길'(2/21, 노동신문; 7/23, 연합뉴스)
 - 2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공기정화 설비를 1천4만 달러(약 103억 원) 어치 수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노동신문은 지난 2월 21일 건물 골조 공사 다음에 쓰이는 자재를 '마감 건재'로 분류하며 현대적인 마감건재의 특징으로 "방화성, 보호성, 흡음성, 공기조화 및 공기정화성"을 제시함.
- 北, 올 5~6월 中에 희토류 대량 수출...19억원 규모(7/27, 연합뉴스)
 - 27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5월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55만 달러 어치 수출한 데 이어 6월에는 132만9천여 달러 규모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작년 1월 중국에 처음으로 희토류 광석(2만4천700 달러 어치)을 수출하고 나서 잠잠하다가 15개월 만에 갑자기 두 달간 187만9천여 달러(약 19억3천만 원·6만2천662kg) 어치를 수출한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올해 1~6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5억7천122만 달러 어치로 지난해보다 23%나 감소했으며, 철광석도 올해 1~6월 대중 수출액이 1억2천69만 달러로 작년보다 5%가량 줄었다고 뉴스는 덧붙임.

라. 대외 경제관계

- "美 NGO '우물파기' 증장비 대북 지원"(7/23, 미국의 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국 민간단체 웰스프링(Well Spring)이 미 상무부 수출 허가를 받아 우물을 파는 증장비를 다음 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함.



- **北, 10월 이전 국제기구와 자금세탁 개혁 논의(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한 데 이어 10월 이전 이들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북한은 또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아시아태평양 지부 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오는 10월 전체회의 이전에 ICRG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VOA가 전함.
- **美 NGO, 북한에 8억원 상당 의약품 등 지원(7/2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비영리구호단체가 북한에 80만 달러(약 8억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말 북한에 의약품과 위생용품을 보냈으며 이달 말께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힘.

5. 사회

가. 공식발언

- **"北, 201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추진"(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16년 안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영국 외교부의 2분기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6년 말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나. 사회동향

- **北, 압록강 유역 폭우 경보(7/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1일 '기상정보'에서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압록강 유역에서 40~70mm, 부분적으로 1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전함.
 - 방송은 22일 새벽부터 낮까지 청천강 유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도 30~50mm, 부분적으로 7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북한이 장마철에 대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축구학교, '공부'도 열심히...국제대회서 선전(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의 대표적인 유소년 축구양성소인 평양국제 축구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축구실력뿐 아니라 다른 학



과목 실력도 뛰어나다고 소개함.

- 통신은 "학생들은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이용해 국제경기 장면들을 분석하고 선진 축구기술지식도 습득하고 있다"라고 밝혀 이 학교가 '생각하는 축구'를 장려하고 있음을 덧붙임.

● 태풍으로 北 곳곳에 폭우...20개 사군서 200mm 이상(7/26, 조선중앙통신)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후 6시 사이에 마트모가 북한 서해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남포시의 전역,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황해남북도, 함경북도,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함.

●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 '홍수폭우 피해 미연에 방지'기대(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근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에서 "전도되박식 강우량계" 개발로 "전국적으로 실시간적인 강우 관측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며 '홍수폭우 피해 미연에 방지'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北, 토론식 수업 중요성 강조...수업방식 바뀌나(7/27, 연합뉴스; 인민교육)

- 연합뉴스가 27일 입수한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2호(4월 15일 발행)는 김정숙제1중학교 리영철 교장이 기고한 '수업시간에 토론, 논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뉴스는 전함.
- 인민교육에 의하면 리 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토론, 논쟁을 많이 시켜 그들의 사고를 최대한으로 계발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평양국제축구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식보급실을 이용하여 국제경기 장면들을 분석하고 선진축구 기술지식도 습득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어, 수학과목 실력이 하나같이 뛰어나다"고 선전(7.22,중앙통신)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北에서 장마가 시작되었다'며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가 내리고 있다'고 보도(7.22,중앙통신)
- '세계 말라리아의 날' 즈음 행사, 7월 23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진행 및 중앙과 각 도들에서 말라리아 방지를 위한 집중선전과 예방활동 전개(7.23,중앙통신)
- 리향미 선수(女 51kg급) 금메달 등 '제4차 중국 공개(오픈)복싱대회' 北 선수들 善戰(권철국, 男 56kg급 2위 등) 및 7월 23일 귀환 소식 보도(7.23,중앙통신 중앙방송)



- 北 선수들, 2014년 국제항공연맹 몽골컵 모형항공자유비행경기대회(7.21~23)에서 우수한 성적(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획득)쟁취(7.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조선의 곳곳에서는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체육열풍' 보도(7.25,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외교부 부부장 "다양한 채널로 북핵개발 저지 노력"(7/24, 연합뉴스)**
 - 장예쑤이(張業蓀)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전날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측 국회의원 방중단과 만나 "중국은 단호하게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채널로 북핵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장 부부장은 "미국이 높은 문턱을 유지하면서 핵 포기 의지를 보이려고 북한 측에 요구하는 것은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의 요구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표단 측은 전했다.
 -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 등 초당파 의원 9명과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등을 포함한 방중단은 지난 21일~24일까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상하이 및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임.

- **IAEA 前사무차장 "北 원심분리기 기술 이란에 이전 우려"(7/24, 연합뉴스)**
 -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백악관 성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 두 정상간 통화는 지난 9~10일 있었던 마중 전략경제대화 이후 이뤄진 것으로 당시 양국은 많은 부분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었지만 이날 통화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양국 간의 차이를 건설적으로 풀 자세가 돼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 시 주석은 "양국 간 다양한 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성과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으며 앞으로도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마중 협력이 양국관계의 주류가 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케리 미국무 "북한 조용해졌다" 평가 논란(7/21,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북한이 이전보다 조용해졌다"며 "아직 북



한 비핵화와 관련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을 외교적 성과로 자평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임.
- 한편 케리 장관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호전적(trigger happy)이었던 전임 정권과는 달리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교를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북 외교와 함께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 이란 핵 프로그램 철회를 대표적 외교 성공사례로 꼽았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대북 원유수출 6개월째 '제로'〈중국세관〉(7/2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1일, 중국 세관총서가 올해 1~6월 북한으로 수출한 원유량이 0을 기록해 올해 상반기 북한에 원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는 중국이 북한으로 원유 25만 1천t을 수출한 바 있음.
- 교도통신은 원유수출 중단이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북한에 극단적인 연료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대북 원유 수출이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상원조 등의 형태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중국이 휘발유나 등유를 북한에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우존스통신이 전한 세관총서의 집계를 인용했음.

● 中인터넷에 "北을 타산지석으로"...'김정은 조롱' 유행(7/23, 연합뉴스)

-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23일, 이달 초 중국의 영상 포털에 올라온 북한의 김정은 패러디 영상이 지금까지 20만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북한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깔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지난 2012년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자 중국 누리꾼들은 숨씨가 없다고 놀려댔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에는 중북 관계가 악화하자 김정은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의견까지 속출한 바 있음.
- FP는 김정은 패러디 영상과 같은 북한 독재자에 대한 비난이 다층적이고 풍자적으로 포장돼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북한과 같은 길을 걸었을 뻔했다는 암묵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자진입북 일본인 대상 송환자 선별착수<산케이>(7/23,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23일,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기 전부터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확인 및 청취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본으로 송환할 대상자 선별도 시작했다고 일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납치된 일본인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지만 북한 국적자인 남편을 따라 입북한 '일본인 배우자'와 공산주의에 대한 공감, 사업실패 등으로 자발적으로 입북한 소위 '행방불명자'는 일반 주민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 또한 북한이 '행방불명자' 중 수용소 경험자, 귀국 후 북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선별한 뒤 '문제없음'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귀국 대비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는 특별수용소에 격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소개했음.

- **일본, 납북 피해자 지원 확대 추진(7/24, 연합뉴스)**
 - 24일자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납북 일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납치됐다가 귀국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돼 있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연장할 계획이며 65세가 넘은 피해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인 지원금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 납치 문제 재조사를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마. 기타

- **北, 10월 이전 국제기구와 자금세탁 개혁 논의(7/23,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한 데 이어 10월 이전 이들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음.
 - 북한은 지난 18일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이번 회원 가입으로 APG로부터 자금세탁테러자금해무기 개발자금 지원 방지 등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평가받게 됨.

- FATF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EU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곳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FATF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 준수를 위한 단속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UFG 연습 때 '북핵 억제전략' 첫 공식 적용(7/24, 연합뉴스)**
 -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리는 한미합동 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고 밝혔음.
 -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쟁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을 의미함.
 - 국방부는 지난 한미 키 리졸브(KR) 연습 때는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소개되는데 그쳤지만 UFG에서는 북한의 핵WMD 위협 상황을 가정해 장성급 지휘관들이 모여 대응태세를 토의하는 TTX(Top Table Exercise)를 진행해 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음.
- **한미, 내주 서울서 소규모 원자력 협상 개최(7/26, 연합뉴스)**
 - 외교부는 25일, 미국 측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우리 측과의 소규모 협의를 위해 28~31일 방한한다고 밝혔음.
 - 양국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 사항인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임.
 -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관련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 내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개정 협상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임.



나. 한중 관계

●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北상황 '소통' 기대(7/2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국방당국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국방전략대회에서 국방부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핫라인 설치합의는 양국 국방부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양측은 2007년부터 핫라인 설치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중국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조만간 핫라인이 구축되면 중국군 수뇌부와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신속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국방부 차원에서 핫라인을 구축한 나라는 미국뿐이며, 한중 양측은 서해와 남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해 해군, 공군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아베 한일관계 개선 발언,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7/21,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일본 측 초청으로 도쿄를 찾은 한국 신문, 방송, 통신사 간부 10명을 지난 17일 총리관저에서 면담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는 한국 언론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아베 총리였기에 매우 이례적인 자리였음.
- 이는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세계 모든 지역과 국가를 상대로 한 전방위 외교'를 표방하며 취임 이후 19개월간 42개국을 방문했음에도 이웃나라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모순'을 서둘러 해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임.
-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고려 및 신념과 한일관계가 동시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선택은 대체로 전자 쪽에 쏠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의 태도 변화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우세함.

● 日, 집단자위권 결정 설명…'한국 우려' 불식 시도 (7/21, 연합뉴스)

-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建裕) 참사관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일본은 전수방위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나갈 것이며 '전쟁을 하는 나라'나 '군사대국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한 무력행사를 위한 이른바 '신(新) 3요건'과 관련, 실제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 국가가 갖는 권리보다 제한적이라고 말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거듭 설명하면서 한국 내 우려 해소를 시도했음.
-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 불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 **한일, 3번째 軍위안부 협의...구체 해법 조율 주목(7/23,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조율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라 말했으며 "일본도 이 문제가 진행되어야 다른 현안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별도의 해결책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현안이니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 **유홍수 주일대사 내정에 일본내 '기대우려' 교차(7/23, 연합뉴스)**

- 23일 일본 정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유홍수 주일대사 내정자가 일본 정계에 넓은 인맥을 갖춘 지일파이지만 '실세'라기 보단 정치권을 떠난지 오래된 정계 원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년시절 일본에 살았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 등을 지낸 그가 한일관계의 '완충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중량급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은 "유 내정자의 기용에는 대사교대를 원활히 진행해 한일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으나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기 전 대사가 귀국하면서 양국 간의 파이프가 가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 **아베 구두메시지 전달..."한일관계 개선위해 노력"(7/25, 연합뉴스)**

-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마스조에 요이치(舩添要一) 도쿄도지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으며, 한편 이날 도쿄도지사의 공식 방한은 18년 만에 이뤄진 것임.
- 마스조에 지사는 "방한 직전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박 대통령 예방이 성사되면 자신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저는 정부 출범 이래 한일관계 중시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고 답했으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신뢰관계를 쌓아 양국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학교수, 국회의원, 후생노동상 등을 거친 마스조에 지시는 자신의 명패에 한글 이름을 병기할 정도로 일본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히는데 이날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일본 정계 인사와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즈음 이래 1년 5개월여만임.

라. 마중 관계

● 중국, 립팩훈련 '감시' 보도에 "국제법 부합"(7/21,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는 21일, 2014년 립팩 합동군사훈련에 중국이 미등록 감시선을 파견해 훈련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중국 국방부의 공식반응을 전했다.
- WSJ은 19일 중국이 립팩 훈련에 초대받지 않은 감시선을 몰래 보냄으로써 양국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군사전문가인 장진서(張軍社) 중국해양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언론이 지나치게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장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감시행위는 매년 100여 차례가 넘고 서해, 동남중국해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 언론의 과장 여부와 관계없이 마중 군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해군, 美와 항모 분야 교류강화 희망(WSJ)(7/22,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관이 최근 마중 양국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초의 항모 라오닝함의 운영 관련 노하우를 미 해군에게서 전수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주니어 그리너트 미 해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 그리너트 총장은 중국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 사령관이 정식으로 제안하고 양측 수뇌부가 이를 승인하면 1년 이내에 조지 워싱턴 호의 중국 기항이 가능하며 기항지는 상하이로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양측의 이같이 빈번한 접촉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정상회담에서 군사관계 개선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를 통해 민감한 기술에 어디까지 접촉을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마. 마일 관계

- **아베 집단자위권 회의서 "마일방위지침개정 속도내라"(7/22, 연합뉴스)**
 - 22일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1일자 각의 회의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현재 마일간 검토 중인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등의 안보법제 검토는 '표리일치'라면서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작업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음.
 -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각의 결정은 마일안보체제의 역지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고, 오노 데라 방위상은 "미국 측에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면서 연말을 목표로 의무성과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작년 마일간에 합의한 시점인 2014년 말까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부의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아베 내각의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일본인도, 태평양서 공동훈련...중국 견제(7/24, 연합뉴스)**
 - 일본 해상막료감부(해군본부에 해당)는 24일,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 인도 해군과 함께 '말라바르' 훈련에 들어가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국유화하고서 처음으로 미국, 인도와 3국 공동으로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서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술기술 향상, 참가국 군과의 협력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으며, 교도통신은 미국과 인도가 매년 실시하는 해군 공동훈련에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5년 만이라고 전했다.
 - 역대 세 번째이자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일본인도 3국 해상 훈련은 사실상 중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바. 마러 관계

- **〈말레이기 피격〉美 "러, 우크라 반군에 계속 무기공급"(7/24,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24일,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 피격 사건 뒤에도 러시아가 친(親)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에 계속해서 탱크와 로켓 발사기 등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은 러시아 군사시설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전달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MH17 피격 사건 이후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 제재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주저해왔지만 러시아가 무기공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2일(현지시간) 열린 EU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의 자본시장과 군사 및 민감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경제제재안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됐음.

- **美 "한반도 배치 검토 사드, 러시아 겨냥한 것 아니다"(7/2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가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을 내놓은데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강경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 국무부는 "NATO와 이란의 위협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는 북한의 위협을 논의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억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사일 협력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국방장관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며 "이런 발언은 한국 지도부가 수차례에 걸쳐 자력으로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에 비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해경국 창설 후 월평균 3차례 센카쿠 순찰(7/23, 연합뉴스)**
 - 중국이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7월 창설한 해경국은 지난 1년간 최소 34차례 해경 함정 편대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 파견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언론은 중국이 센카쿠 해역에 대해 이런 통상적인 순찰 항해 체계를 구축한 것은 자국의 영해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며 항해 중에 일본 선박의 중국 영해 진입을 발견하면 경고한 뒤 몰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을 상대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지난해 7월 23일 국가해양국, 공안, 농업부, 해관(세관) 등에 산재한 해양경찰 기능을 한데 모은 해경국을 창설했음.
- **中日 외교당국자 비밀접촉…日, 정상회담 요청<교도>(7/2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4일, 이달 중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간부가 베이징을 방문해 승보(熊波)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과 극비 접촉해 면담을 했다고 보도했음.
 - 중일관계 소식통들은 이 외무성 간부가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승 부국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대일 외교 전문가인 승 부국장은 과거에도 극비리에 일본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협의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만남이 중일 정상회담 실현으로 이어질지 주목됨.



- 한편 23일, 베이징에서 아마자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를 만난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은 APEC을 이용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관해 "현시점에서는 어렵지만 실현하고 싶다면 (일본 측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 중국주도 아시아투자은행 불참 통보<산케이>(7/25,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25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중국과의 재무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다는 보도했다.
-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AIIB의 설립 취지가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의 인프라 정비를 자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ADB와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이 생길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음.
- AIIB 문제는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현 일본은행 총재가 ADB의 수장으로 있었고 현 ADB 총재도 일본인인 점에서 보듯 중일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아시아 헤게모니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일본, 중국주도 아시아투자은행 불참 통보<산케이>(7/25, 연합뉴스)**

- 아베 일본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매개로 중남미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를 키우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5개국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 아베 총리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반대를 뚫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안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한편 내년 10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0개국) 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 그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방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직간접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 정책에 대해 지지 확보를 시도할 전망이다.

아. 기타

● **일본정부 "유엔 군위안부 권고 매우 유감"(7/2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군위안부 관련 공개사과와 책임인정 등을 요구한 유엔 시민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대처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음에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 스가 장관은 군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유



엔 위원회의 권고)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유엔 시민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내부 불량녹화물 수시 단속(7/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109상무'가 숙청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내부 선전용으로 제작한 녹화물도 수시로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동북지방에 친척방문 차 나온 황해북도 주민은 "요즘 하도 국가에서 CD, 메모리 장치(USB) 검열을 심하게 해서 집안(북한 내부)이 소란스럽다"면서 "한국 드라마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만든 음반과 동화상 녹화물도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주민은 북한 당국이 문제가 있는 내부 영상물을 불량녹화물로 분류하고, 이 영상이 수록된 CD와 메모리 기억기들을 모두 회수하고, 책자로 발간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재배포 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이 검열은 불법영상물 전문 단속기관인 '109상무'가 주도하고 있으며, 검열 요원들은 수시로 직장과 학교에 나와 '당에서 지정한 불법 녹화물들을 다 바치라'고 지시하고 있고 함.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은하수 관현악단 예술인 처형 사건이 있는 뒤, 김경호 등 가수들이 부른 노래 CD가 모두 회수됐고, 장성택 숙청 후에는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 비서 등 장성택의 사람들로 분류된 고위직들이 사라질 때마다 관련 영상들도 걷어갔고 함.
 - 이 소식통은 "요즘은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109상무가 CD검열을 한다고 하면 또 누가 죽었구니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인권은 곧 국권...자주성 지킬 것"(7/22, 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참다운 인권 보장'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적 나라에 대한 인권문제를 날조하고 굴종하는 나라들은 인권옹호국으로 규정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공격 등을 거론하며 엄중한 인권 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라고 비난함.
 - 또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힘을 넣는 것이 인권이자 국권"이라고 강변했음.



● 북 주민들, 영예군인에 의혹의 눈길(7/22,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의 제대 군인들 중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어 북한주민들 속에서 이들의 제대이유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안남도 주민 소식통은 "딸 가진 사람들이 이들 영예군인들로부터 혼인 중매가 들어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말했음.
- 겉으로는 멀쩡한 영예군인 제대자들이 실은 방사능에 피폭된 희생자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번지면서 방사능을 맞은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도 가질 수 없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다고 소식통이 설명함.
- 소식통은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고, 어디를 다쳐서 영예군인이 됐는지 설명하지 않아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분위기이며,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면 핵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했을 것이고 최고 보안을 요하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간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北보위원, 외부통화 눈감아준 대가로 송금액 20% 갈취"(7/22, 데일리NK)

- 북한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들이 주민들의 외부 통화를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갈취해가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올 초에 국경지역에서의 불법통화를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대량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회령지역에서는 (외부와) 통화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런 점을 이용해 '거머리(보안원, 보위원을 의미)'들이 또 달라붙어 돈을 뜯어가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이 설치한 전파탐지기는 24시간 관할지역을 탐색한다. 중국산 휴대전화 발신 표시가 확인되면 발신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보위원이나 보안원에게 북한산 휴대전화를 이용해 즉시 통보됨.
- 순찰 중인 보위원들 역시 개인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소지하고 있어 보위부에서 통보한 발신지역을 집중 확인해 발신위치까지 정확하게 접근해 불법행위자를 체포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보위원들이 주민들의 외부 통화를 묵인해주고 남한 가족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갈취해가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임.
- 소식통은 회령 유선동과 무산 흥암동 지역은 보위지도원이 눈감아주는 대신 송금액의 20%를 바쳐야 한다고 전함.
- 주민들은 불법행위(전화통화, 송금 등)를 하면 휴대폰은 물론, 송금현장에서는 돈을 모두 회수당한다. 이에 송금액의 20%를 보위원들에게 주더라도 그 방법이 안전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음.
- 북한 당국은 탈북과 내부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대대적 감청과 불법행위자 색출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이런 실정을 간파한 권력지배층들의 '불법행위' 기담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외부와의 통화 단속과 송금 등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FATF, 북한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 환영(7/23, 미국의 소리)**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대변인실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을 환영하며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체제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음.
-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북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측에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고 계속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의 아태 지부 회의에 참석하고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했음.
-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단속체제가 필요한데, 북한의 최근 움직임들이 같은 체제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라는 것임.
-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국제협력점검그룹의 아태 지부와 직접 접촉해왔으며, 양측이 만나 북한이 해결해야 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또한 이 같은 논의는 북한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필리핀 마카오에서 열린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앞으로 3년 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정회원국 자격 부여를 결정할 예정임.
-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옵서버 회원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 지원, 자금세탁 등의 방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과 조치를 개발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음.

● **북 국경경비대에 설사병 만연(7/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속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병이 번지고 있는데, 원인이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공급된 '물고기 선물'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속에서 "장군님이 주신 설사병"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양강도의 한 국경경비대 군인은 "매 주 토요일 저녁이면 썩은(상한) 물고기로 반찬과 국을 끓여주는데 그것을 먹고 나면 2~3일 정도 복통과 설사로 큰 고통을 하게 된다"고 말했음.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배려로 북한 당국은 국경경비대 병사들에게 매주 토요일 한 끼는 물고기를 먹이고 있는데 식탁에 오른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부패해 이를 먹은 군인들속에서 식중독과 설사병이 유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물고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마구 섞인 잡탕 물고기"라며 "수산물 가공사업소들에서 수출에 적합지 않은 물고기들은 따로 가려내 냉동상태로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있



- 다"고 말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함경북도의 한 국경경비대 관계자는 "군인들에게 공급될 냉동물고기는 아무런 냉장 장치도 없이 그대로 열차방통에 실려 온다"며 "열차에서 다시 국경경비대여단 후방창고까지 수송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변질 된다"고 지적했음.
 - 특히 국경경비대 간부들이 가뜩이나 변질된 냉동물고기를 고의로 해체해서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장사꾼들에게 넘긴다며 이렇게 하고 남은 물고기들은 각 대대, 중대로 공급되는 과정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변질됨.
 - 그러나 공급된 생선이 아무리 심하게 부패해도 '장군님(김정은)이 보내 주신 물고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함.
-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인천장애인 AG 북한 참가 독려'(7/25, 미국의 소리)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카이저 라샤드 사취데프 총괄담당관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힘.
 - 또 북한의 참가에 대비해 조직위원회가 숙박과 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음.
- 북, 예술극장 간부들 연좌제 처벌(7/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 '김정숙 예술극장'의 간부들이 동료간부의 탈북으로 인해 연좌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말 '김정숙 예술극장' 성악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탈북한 사건이 있었다"며 "성악과장 탈북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예술극장 간부들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밝힘.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사건으로 예술극장 단장을 처벌하려 했으나, 그가 한 가극에서 김정숙의 역을 맡았다는 점을 참고해 1년간의 무보수(무 월급) 노동처벌에 그치고, 대신 초급당 비서가 양강도 백암탄 광 노동자로 추방됐고 종합연출과장과 기악과장 등의 간부들은 6개월 간의 무보수노동 처벌을 받았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김정숙 예술극장'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처벌된 사건을 두고 양강도 간부사회의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하다"며 "특히 공장, 기업소 간부들의 경우 이번 간부처벌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함.
 - 소식통들은 "탈북하는 사람들이 내가 탈북한다고 소문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런 식으로 해당단위 간부들까지 처벌하면 누가 공장, 기업소에서 간부를 해 먹겠느냐?"는 현지 간부들의 격양된 분위기를 강조했음.
- 북 수명 세계평균보다 4년 짧은 70세(7/2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4 인간개발 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를 보면,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70세로 세계 평균 71(70.8)세보다 1년, 그리고 동아시아 평균인 74세보다 4년 짧음.

- 북한 여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 73세보다 약간 높은 73.4세지만, 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인 68.8세보다 2.5년 짧음.
- 인간개발보고서에 포함된 북한 관련 통계는 수명과 인구 수, 건강상태, 범죄율과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임.
- 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중 28%가 영양실조로 국제기준의 권장 키에 비해 작은 발육부진을 겪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2달러 이하의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소개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며, 북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2010년 기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2. 북한인권

● 통일연, 유엔 北인권보고서 한국어판 발간(7/21, 연합뉴스)

-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보고서 한국어판을 21일 발간했음.
-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COI 최종보고서가 영어로 나온 직후 한국어 번역 작업에 착수해 3월 말 국문 요약본을 냈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상세보고서 번역도 마쳤음
- 통일연구원은 최종보고서 한국어판을 정부 부처와 북한인권단체에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도 쉽게 보도록 하며 국내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도 보낼 계획임.

● 국제 인권단체 '북한, 지난해 최소 17명 처형'(7/22, 미국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 '핸즈 오프 케인'이 21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사형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이후 적어도 19건의 사형이 집행됨.
- 보고서는 지난해 적어도 17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적어도 2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처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그 가족, 측근들이 처형됐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북한에서는 주로 정치적 이유로 처형이 이뤄졌다고 분석함.
- 북한의 경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어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다고 밝혔음.
- 핸드 오프 케인의 엘리사베타 잠파루티 씨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



에 북한에서 2000년도 이후 공개 처형이 줄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당국이 미약 밀수와 횡령 등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당국 자들과 식량을 찾아 중국과 한국으로 탈출하는 주민들도 처형한다고 지적함.

● **내달 홍콩서 제3회 북한인권 영화제(7/22, 자유아시아방송)**

- 홍콩의 북한인권 단체 '탈북자 관심(Defectors Concern)'의 오웬 라우 대표는 다음달 중순 제3회 홍콩 북한인권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히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와 한국의 북한전략센터 등의 인권단체와 협력해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여,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북한 인권문제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영국 외교부 '북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16년 비준할 것'(7/23, 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는 22일 발표한 올해 2분기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는 2016년 말 이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2013년 11월에 장애인 관련 국내법을 개정한 북한이 2016년 말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에 발생한 평양 건물 붕괴 사고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옥 씨에 대한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 등은 북한이 여전히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교류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지적함.
- 영국 외교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등 인권우려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분기별로 인권 관련 변동상황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음.

● **영 정부 '북 인권 책임자 ICC제소' 지지(7/23,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Sayeeda Warsi) 선임부장관은 23일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이행방안에 관한 상원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유린 책임자의 처벌을 공식 논의하도록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영국 정부는 이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등과 가진 비공식 북한인권 토론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대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등과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프랑스호주 유엔대사 공동서한 "유엔 안보리 COI 보고서 공식 논의해야"(7/26, 미국의 소리)

- 유엔주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와 제라르 아로 프랑스대사, 게리 퀸런 호주대사는 지난 17일자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다룰 것을 촉구했으며, 안보리의 적절한 조치도 요구함.
- 이 서한에서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지난 4월 17일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물러 방식'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공동 주최한 세 나라 대사들은 당시 회의 결과를 요약한 비공식 문서를 이번 서한에 첨부했음.

3. 탈북자

● 성남시, 탈북주민 정착지원 조례 추진...입법예고(7/21, 연합뉴스)

- 성남시가 탈북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협약조정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음.
- 조례안은 시가 탈북주민과 그 가정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자녀보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정착과정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음.
- 또 탈북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됨.

● 탈북 과학기술인 "북한선 중산층 이상으로 실었는데..."(7/22, 동아일보)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탈북 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와 공동으로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설문은 NK지식인연대 소속 탈북자 600여 명 가운데 과학기술인 출신 30명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남한 체류기간은 평균 8년으로, 북한에서 전문학교 이상 학교를 졸업해 대학교수, 과학원 연구사, 산업체 현장기사 등이었음.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자의 60%는 '10년 이내 남한에서 동일계 직업을 못 구할 것'이라고 예측해 대부분 남한에서 과학기술인으로 다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3.3%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절반



(50%)은 북한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응답함.

- 그 원인으로 응답자 대다수(73.3%)는 남한사회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꼽았으며, 세부요인으로 '남북한 사이 교육시스템의 차이'(66.7%)가 가장 많았으며 북한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용어차이, 나이제한, 탈북자 대한 선입견 등도 지적했음.
- 탈북 과학기술인은 대부분(66.7%)이 북한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했으며, 대다수(93.3%)가 북한사회 내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했으며, 북한사회 처우가 양호했던 만큼 상실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연구팀은 통일 후 북한 지역 자생력을 키우려면 현지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큰 만큼, 탈북자들을 활용해 미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탈북자 27명 中서 공간에 체포... 북송위기(7/23, 동아일보)

-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가족 등 27명이 중국 공간에 체포돼 북송(北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은 22일 "40대 부부를 비롯한 4가족과 20대 청년 등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는 갓 돌을 넘긴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 이들은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으로 오기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하던 중 칭다오(靑島) 등 숙소에 은신해 있다가 적발되어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 국경경비대로 신병이 인계됐지만 북한에 넘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정부는 "탈북자 구금 여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탈북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평소에도)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中외교부 부부장 "다양한 채널로 북핵개발 저지 노력"(7/24, 연합뉴스)

-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 등 초당파 국회 의원 9명과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등을 포함한 방중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함.
- 방중 대표단은 장예쑤이(張業逵)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3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30여 명이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도적 견지에서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음.
- 류 상무위원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지만 우리는 관련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올해 탈북학생 2183명 역대 최대...학업중단을 감소(7/24, 데일리NK)

-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4 탈북학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탈북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1128명(51.7%), 중학생 684명(31.3%), 고등학생 371명(17.0%)으로 총 2183명임.



- 2008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5년 전인 2009년 (1143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39명 늘어 979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44.9%를 차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94명(60.67%), 중학교 371명(37.90%), 고등학교 14명(1.43%)으로 집계됐음.
 -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0.8%에 달했던 학업중단율은 2009년 6.1%, 2010년 4.9%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2.5%로 나타남.
 -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이 0.6%로 낮았지만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7.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는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개발보급 ▲교원연수를 통한 탈북학생 관리 강화 등을 꼽았음.
- **미 국무부 '중국, 탈북자 보호 의무 지켜야'(7/26,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붙잡혀 강제복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당국에 탈북자를 강제복송 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에 협조하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중국의 탈북자 처우 실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탈북자에 보위부 간부 가족 포함...북 "우선 복송"(7/26, MBN)**
-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일행 가운데 국가안전보위부 등 군 간부 가족이 포함되어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 특별히 우선 복송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짐.
 - 중국에서 최근 체포된 탈북자 27명의 신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40대 부부와 어린이 등 네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재 중국 단둥 변방대에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들 가운데 북한군 군단급 장교와 안전보위부 가족이 3명 포함돼 있으며, 북한은 중국 당국에 "군 간부 가족 3명부터 우선 복송해 달라"고 요구했음.
 - 북한은 체제 안정과 충성 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의 탈북에 '괘씸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4. 이산가족

- **재미 한인들, 이산가족 상봉 방북... "유골 반출 요청할 것"(7/23, 미국의 소리)**
 - 한국계 미국인 2 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오는 10월 북한을 방문해 한 측에 숨진 가족의 유골 반환을 요청할 계획임.
 -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는 지난해 7월부터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1년 넘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실향민들의 가족을 찾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86살 방흥규 씨와 77살 이진용 씨는 오는 10월 11일 북한을 방문해 8박9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주로 해외에서 방문하는 한인들이 머무는 평양의 해방산 호텔에서 가족과 2박3일을 함께 보낼 예정임.
 - 방 씨와 이 씨 모두 이미 사망한 누나와 형의 유골을 반출할 수 있는지 북한 측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함.
 - 이번 가족 상봉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져 주목됨.
 - 이 단체의 백행기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회원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 가능성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처음으로 타진했으며,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시 신청자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 값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도 '적정한 선'으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백 사무총장은 당국 간 협상을 통하지 않고 민간 기구가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데 의미를 뒀으며, 이번 방북을 순조롭게 마치면 북한 당국과 협의해 이 행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납북자

- **"北, 자진입북 일본인 대상 송환자 선별착수"〈산케이〉(7/23, 연합뉴스)**
 - 북한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일본인 중 일본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에 대한 선별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북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산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기 전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공감, 사업실패 등으로 자발적으로 입북한 일본인을 칭하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확인 및 청취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본으로 송환할 대상자 선별도 시작했음.
 - 신문은 북한이 '행방불명자' 중 수용소 경험자, 귀국 후 북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선별한 뒤 '문제없음'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평양으로 보내 귀국 대비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는 특별수용소에 격리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소개했음.



- **몽골 대통령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성과 있을 것"(7/24, 연합뉴스)**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24일 보도된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북한과 일본이 최근 납북자 문제를 두고 합의한 것에 관해 북한이 "이전에는 납치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동조사하고 대화하는 것에 응하는 등 북한이 바뀌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전에 북한에 보낸 특사로부터 '일본에 대한 대응이나 표현이 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납치 문제 재조사가 "이번에는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북한과 일본이 정기적으로 올란바토르에서 협의하는 형식을 양측에 제안했다. 6자 회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요청이 있으면 북일 정상회담장도 제공할겠다"고 북일 외교를 중개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음.

- **일본, 납북 피해자 지원 확대 추진(7/24,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자국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 중임.
 - 아사히(朝日)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납북 일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납치됐다가 귀국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돼 있어 내년 3월 종료할 예정이지만 지급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65세를 넘은 피해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인 지원금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납치 피해자의 자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늦춰서 낼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법안을 토대로 다음 달 지원책을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 일본이 납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납치 문제 재조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기대감을 보여줌.

- **日, 북한 미사일 발사 항의...아베 "유엔결의 위반"(7/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26일 밤 동해를 향해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 항의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멕시코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7일 새벽(한국시간)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북일 정부 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北, 대북지원 활동 '드레스덴 무관 확인' 요구(7/23, 연합뉴스)
 - 최근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폭넓게 허용, 남북 간 접촉이 활발해졌지만 북한은 이들 지원활동과 드레스덴 제안과의 연관성을 따져 물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대북 소식통은 "민간단체들이 방북해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보도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 사업이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확실히 얘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드레스덴 제안에는 여전히 심한 반감을 품고 있음.
 - 정부는 제한적 민간 지원만을 허용해오다가 최근 들어 농업개발, 산림 녹화병충해 방지, 말라리아 방역 등의 분야로 허용 범위를 넓혔으나, 북한은 이런 움직임이 드레스덴 제안과 연계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임.
 -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이 흡수통일 논리에 바탕을 둔데다 자신들을 시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했음.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되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임.
 - 정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서로 관계를 개선해보자고 하는 큰 방향은 같지만 프레임이 달라 서로 자기 프레임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음.
- 미 NGO, 다음주 북한에 우물파기 중장비 지원(7/23, 미국의 소리)
 - 미국 대북 지원단체 '웰 스프링 (Well Spring)' 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우물을 파는 시추기계와 트럭 등 중장비를 다음 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며,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도 받았다고 밝힘.
 - 이번에 보내는 중장비는 미화 12만5천 달러 상당으로, 린튼 대표는 북한 내 협력기관인 '지하수 개발준비실'로부터 관련 장비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함.
 - 이번에 보내는 장비들이 병원과 학교, 고아원 등 시설에서 우물을 파는데 사용될 것임.



● 상반기 6개국서 북한 교육 지원..우리 민간단체는 비공개 요청(7/23, 아시아경제)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은 웹사이트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6개 나라 11개 단체들이 북한의 교육 분야를 지원했음.
- 조선교육후원기금은 북한이 교육 분야에서 외부 후원을 받기 위해 2005년 1월에 설립한 민간단체임.
- 기금은 각국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 내 학교와 기숙사 개보수, 컴퓨터를 위한 교육설비 제공, 외국어 실습, 자연재해 지역 학교 긴급 지원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지원 유치 실적을 공개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뉴질랜드동포협의회,' 핀란드의 농업·보건복구계획, 영국 만나 미션유럽,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및 홍콩그레이스미션, 스웨덴 코리아마음재단 등 각국의 민간단체 및 대학 등이 북한의 교육분야에 지원했음.
-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 애육원, 육아원 등에 대한 영어강습부터 아동 겨울내의나 과일 통조림같은 식품, 빵 생산용 추가 설비와 자재 등으로 다양함.
- 이러한 발표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승인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단체들은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비공개를 원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미 NGO, 북한에 80만 달러 상당 의약품 지원..이달 말 도착 예정(7/25, 미국의 소리)

-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가 지난 달 북한에 8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 이달 말에 북한에 도착해 평양, 평안도, 황해북도의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제공될 예정임.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에는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당뇨병 관련 의약품과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었음.
- 아메리카어스가 지난 4월에 지원해 6월에 북한에 도착한 지원품은 미화 180만 달러 상당으로 항생제와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과 영유아 용품 등이 포함.

8. 북한동향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7.22, 중앙통신·노동신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